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1. 26.(금)

정부가 택시 플랫폼 요금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보도 내용 (한국경제 가판, 1.27) >

◆ ‘손발 다 묶인’ 택시 플랫폼에 ‘요금 규제’까지 하겠다는 정부

- 플랫폼업계는 정부가 직접 요금 수준을 컨트롤하면 택시 운행대수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

- 정부가 요금 산정 등에 대해 개선명령 권한을 도입하면 운행대수 감소 등 택시 생태계가 망가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정부가 도입하려는 개선명령은 독점적 택시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이용해 과도한 호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제도입니다.
 - 호출료는 단순통보 수준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, 택시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호출료 책정에 대한 관리제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.
 -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소비자, 택시업계, 플랫폼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
-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택시 플랫폼이 공정 경쟁하는 시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주열 (044-201-3823)
		담당자	팀 장	조태영 (044-201-4770)
			사무관	노지훈 (044-201-4756)
			사무관	서운원 (044-201-3813)